의정활동보고서

제185회 임시회(2004. 1. 16)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아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제185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시길 기원합니다.

올해에 연간 회기운영 계획은 금년 첫 임시회가 2월 4일부터 13일까지 입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9일에 일본총리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을 매우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은 역사적,지리학적,국제법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 최고책임자의 망언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독도가 경상북도 관할에 속하고 있어 하루빨리 우리 도의회가 여기에 대응하는 강력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도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제 요로에 전파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표명을 계기로 다시는 이번

같은 망언의 재발이 방지되고

또한, 독도를 더욱 사랑하고 잘 보존하여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실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엔 늘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1. 16

경상북도의회의장 崔 圓 炳

차 례

I. 개 황	
II. 의사 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위원회	
III.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위원회	
IV. 민원 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2. 조례 공포사항	
3. 기타 사항	
※ 부 록 : 결의안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85회 임시회는 2004년 1월 16일 개최하여 1일간의 회기동안 1차의 본회의와 1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9일 일본 총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 도의회 차원의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요로에 전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1월 16일(금) 긴급히 소집되어 당일 오전 11시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채택한 “일본의독도영유권망언규탄결의문”에 대해서

1월 16일(금) 오전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5회경상북도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일본의독도영유권망언규탄결의문채택의건,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을 의결하고 제18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 일정

1. 소 집

가. 집회 구분 : 임시회

나. 소집 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라. 집회공고일 : 2004. 1. 14

마. 집 회 일 : 2004. 1. 16(금) 14:00

2. 회 기

가. 회의 기간 : 2004. 1. 16(1일간)

나. 개의 횟수

○ 본회의 : 1회(누계 42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 획	행정 사회	교육 환경	농수산	산업 관광	건설 소방	특별
금회	1			1					
누계	194	20	21	27	30	21	23	21	31

※ 누계는 제7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4. 1. 16(금) 14:00	1. 제185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일본의독도영유권망언규탄결의문채택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제 1 차 원안가결 "

나. 위원회

<행정사회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 1. 16(금) 11:00	○ 일본의독도영유권망언규탄결의문 채택의건	제 1 차 원안가결

Ⅲ. 의안 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의	심 의 · 의 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1 (165)	1 (164)	1 (148)	(15)	(1)		(1)	
조 례 안	소 계	(68)	(68)	(64)	(3)	(1)		
	의 회 제 안	(6)	(6)	(4)	(1)	(1)		
	도지사 제 출	(50)	(50)	(48)	(2)			
	교육감 제 출	(12)	(12)	(12)				
예 산 · 결 산	(17)	(17)	(8)	(9)				
동 의 · 승 인	(46)	(46)	(45)	(1)				
건 의 안	(7)	(7)	(6)	(1)				
결 의 안	1 (8)	1 (8)	1 (8)					
기 타 안	(19)	(18)	(17)	(1)			(1)	유보1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부결	철회	계류
		가 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1 (167)	1 (164)	(68)	(17)	(46)	(7)	1 (8)	(18)			(3)
의회운영	(5)	(5)	(4)				(1)				
기 획	(15)	(14)	(7)		(5)	(1)		(1)			(1)
행정사회	1 (46)	1 (45)	(28)		(15)	(1)	1 (1)				(1)
교육환경	(21)	(21)	(15)		(5)			(1)			
농 수 산	(10)	(10)	(3)		(6)	(1)					
산업관광	(21)	(21)	(9)		(11)		(1)				
건설소방	(9)	(9)	(2)		(4)	(2)		(1)			
특 별	(17)	(17)		(17)							
본회의	(23)	(22)				(2)	(5)	(15)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별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63)	(5)	(8)	(9)	(11)	(5)	(3)	(6)	(5)	(11)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7)	(4)	(2)	(1)						
교육환경	(11)			(1)		(5)		(5)		
농 수 산	(6)			(1)	(1)				(4)	
산업관광	(14)		(6)	(1)			(3)			(4)
건설소방	(20)	(1)		(5)	(10)			(1)	(1)	(2)
특별위원회	(3)									(3)

※ ()안은 제7대 의원 누계

나. 처 리

위원회별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1 (62)	1 (62)				(1)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7)	(7)				
교육환경	(11)	(11)				
농 수 산	(6)	(6)				
산업관광	1 (14)	1 (14)				
건설소방	(19)	(19)				(1)
특별위원회	(3)	(3)				

※ ()안은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비 고
경상북도지사 (2004. 1. 12)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안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3. 12. 2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	2003. 12. 31
2003. 12. 2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2004. 1. 5
2003. 12. 2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	2003. 12. 31
2003. 12. 2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	2003. 12. 31
2003. 12. 2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2003. 12. 31
2003. 12. 26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2004. 1. 12
2003. 12. 2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	2004. 1. 5
2003. 12. 2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2004. 1. 5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3. 12. 2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2004. 1. 5
2003. 12. 2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	2004. 1. 5
2003. 12. 2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	2004. 1. 5
2003. 12. 2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004. 1. 5

3. 기타 사항

○ 재야의 경북대중 타종식

- 일 시 : 2003. 12. 31(수) 24:00
- 장 소 : 영덕 삼사해상공원
- 참 석 : 최원병 의장

○ 매일신문주최 신년 인사회

- 일 시 : 2004. 1. 2(금) 11:30
- 장 소 : 인터불고 호텔
- 참 석 : 최원병 의장

○ 경상북도 여성 신년교례회

- 일 시 : 2004. 1. 7(수) 10:3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 도의원 신년 인사회

- 일 시 : 2004. 1. 8(목) 11: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도의원

○ 도의회 지원인사 간담회

- 일 시 : 2004. 1. 9(금) 11: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최원병 의장, 김선종·정무응 부의장, 손규삼 운영위원장,
신영호 교육환경위원장, 방대선 농수산위원장, 이 달 건설소방위원장,
자문교수 10명, 고문변호사 2

○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 기 간 : 2004. 1. 12 ~ 1. 20
- 대 상 : 도내 12개 시·군에 소재하는 16개시설
- 참 석 : 해당지역 출신 도의원

○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시상식

- 일 시 : 2004. 1. 14(수) 15: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 제10회 농업경영인대상 시상 및 정기 대의원 총회

- 일 시 : 2004. 1. 14(수) 11:00
- 장 소 : 농업인회관
- 참 석 : 방대선 농수산위원장(축사)

부 록

□ 결 의 안 : 1건

- 일본의독도영유권망언규탄결의문채택의건

일본의 독도영유권 망언 규탄 결의문(안)

의안 번호	168
----------	-----

제안년월일 : 2004. 1. 16

제안자 : 행정사회위원장

1. 제안이유

- 독도는 역사적, 지형학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의 영토가 명백함에도 지난 1월 9일 일본국 총리가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을 문제삼아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영토다”라고 하는 침략적 망언을 한데 대하여
-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청와대 및 관계 중앙부처에 송부함은 물론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유엔 및 일본 정부에 전달코자 함.

2. 주요골자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제국주의적 망상을 철회하고 독도의 한국 영토 인정과 한국 국민에 대한 사죄 및 반성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한 것임.

3. 주 요 내 용

일본의 독도영유권 망언 규탄 결의문

지난 1월 9일 일본국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을 문제 삼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망언을 함으로써 우리국민을 다시한번 격분케 하고 있다.

이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군국주의와 황국신민주의의 망상에 사로잡힌 비양심적이고 도발적인 망발이기에 『300만 도민』의 이름으로 통렬히 규탄하고자 한다.

독도는 분명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에 소재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옛부터 우리 어민들의 생업의 터전으로서 지금은 우리도민이 거주하는 등 실효적인 점유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양심 있는 일부학자와 시민운동가들로 부터도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 주장과 19세기초에 작성된 일본의 고 지도에는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등 명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금번 일본의 국가최고 수반인 총리가 직접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며 이는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상의 도발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1999년도의 신 한·일어업협정시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주장하는 망언에 이은 또 다른 침략적 발언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 의회는 『300만 도민』 과 더불어 일본총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을 규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 . 일본 총리와 일본정부는 독도를 국제적 영토분쟁지역으로 끌어들여려는 제국주의적 망상을 버리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철회하라.!
- . 일본정부는 독도침략 야욕을 버리고 한국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 . 일본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을 일삼지 말라.!
- . 일본은 세계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왜곡된 역사 교육을 반성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라.!
- . 우리정부는 일본정부에 진실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라.!
- . 우리정부는 신한 · 일어업협정시 독도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외되는 우를 범하므로써 발생된 영유권 분쟁의 빌미제공 및 어업권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협상대상자를 엄중 문책하고 신한 · 일어업협정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추진하라.!
- .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개될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 정부가 져야 할 것이며, 우리 경상북도 의회가 취할 수 있는 더욱 강경한 조치도 불사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4년 1월 16일

경상북도의회 의원일동